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Method of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김 강 섭* 전 택 기**
Kim, Kang-Sub, Jun, Taek-Ki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change and contents of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by literature review. And this paper analyzes the results and problems of rural village in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method of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Based on this study, mainly three results can be drawn as follows ; first,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must establish sustainability and locality to main direction of project. Second, this project demand new system and role of local government. And the third, this project are performed by residents, and an educational program and public information to inspire participation consciousness are necessary.

키워드 : 지속가능성, 미래, 경제성, 농촌 활성화, 주민 참여, 그린 투어리즘

Keywords : Sustainability, Future, Economic Efficiency, Rural Activation, Resident Participation, Green Tourism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 농촌은 단순한 식량생산기지가 아니다. 농촌은 고층건물 사무실에서 일하고 고층아파트에서 살면서 그 높이만큼 흙과 자연에서 멀어진 도시민들에게 자연과 어울리며, 인간 본성을 회복할 수 있는 미래의 희망공간이요, 돌아가야 할 고향이다. 2000년대 들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다양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업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농촌지역 활성화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 사업으로 2004년부터 시작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4년에 선정된 권역의 1단계 사업(2004년-2007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사업의 추진성과와 실패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것을 통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논리적 근거의 정립,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향후 농촌마을과 관련된 각종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의 목적은 사업 추진성과와 문제점, 개선 사항을 고찰하여 사업추진의 당위성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대상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으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2004년에 선정된 36개 권역 중 16개 권역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실태 조사와 면접조사를 시행하였다.¹⁾(표7 참조)

문헌연구²⁾를 통해 추진 현황과 사업내용의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실태조사³⁾, 면접⁴⁾ 및 사진촬영 등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면접조사는 각 권역의 추진위원장 혹은 사무장,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 지사 담당자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 등 사업추진에 대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현장조사와 면접조사는 2008년 9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20일간 시행하였다.

1.3 선행연구

본 사업에 대한 선행연구는 평가 지표 개발, 계획의 내용 분석, 유형별 사업 내용 검토 등에 관한 것이 다수이다. 이 중에서 이정환 외(2007)는 소득기반시설과 농촌관광시설에 집중 투자 계획 수립, 도시민 유치 방법, 체험장, 하드웨어 시설의 규모 적정성 검토, 권역주민의 자

1) 본 연구의 연구자는 '04년 기본계획수립 36권역 중 1/2(16개 권역)을 조사할 의도였다. 하지만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다 보니 1/2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05년 계획수립 권역 2곳이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1년이라는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2개 권역을 포함하여 16개 권역을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2) 사업의 개념정리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 및 자료를 분석하였고, 평가지표 및 도구작성을 위하여 기존의 평가연구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였다.

3) 실태조사는 조사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과 변경 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4) 면접조사는 가장 혹은 대표자를 대상으로 마을 공공시설물의 실태 및 마을(권역) 전반에 대해 조사하였다.

* 정회원, 농어촌연구원 주임연구원, 공학박사

** 정회원, 농어촌연구원 주임연구원

본 연구는 2008년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의 자체자금연구로 진행된 과제의 일부임

발적 관리와 운영, 지자체의 의지 등을 강조하였다. 김승근(2006)은 지역 주민은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 관련 사업들이 생활개선과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주민의 이해를 돕고 참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적극적인 홍보, 인재양성과 리더십 교육 강화 방안, 마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중요하게 꼽았다.

김경량 외(2006)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간평가체계를 개발하였으며, 한경수 외(2007)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간 점검을 위한 평가지표의 적용사례를 통해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개요 및 추진 현황

2.1 추진배경 및 목적

1990년대 이후 도·농간의 생활환경격차 해소차원에서 생활환경정비 위주의 정주권개발과 문화마을조성사업(현 전원마을조성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이들 사업으로 상하수도, 주거단지 조성, 재정비를 통해 주민편익 증진에는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하향식 SOC 위주 사업추진으로 농촌 고유의 농촌다움(rurality)을 유지하는 쾌적한 공간정비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농촌은 소득증가, 주5일근무제 시행, 교통망확충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전원주거·휴양·관광 기능을 갖춘 쾌적하고 농촌다움을 지닌 복합생활공간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여건의 변화는 농촌 어메니티(amenity) 자원과 지역개발을 연계시켜 농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정책사업, 즉 본 사업이 태동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사업은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해 추진된다. '2008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면, 본 사업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 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2 사업의 추진체계

본 사업의 사업비⁵⁾는 2005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로 편성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당초의 추진체계가 일부 조정되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평가를 통하여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기본 계획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의해 주로 수립된다. 이후 세부설계와 시행계획을 수립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며, 최종적으로 준공검

5) 본 사업의 사업비는 2010년부터 포괄보조금제에 의해 광특회계에 포함되어 추진될 계획이다.

사와 정산을 통해 사업이 마무리 된다.

2.3 주요 사업내용의 변화

1) 사업목적의 변화

본 사업의 목적(2004년)은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의 도모' 하는 것이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농촌 경관을 중요시 하였으며, 주민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부분에도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었다.(표1 참조)

표 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목적 변화

| 구분 | 사업목적 |
|---------------|---|
| 2004년 | 농촌다움의 유지 보전과 쾌적함 증진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 2005년 - 2008년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 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

2) 사업 추진방향의 변화

본 사업의 개발 단위는 권역이다. 즉 마을이나 면 단위의 개발이 아니라 3-5개의 행정리를 묶어 권역별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2004년도의 추진 방향은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을 상호 연계하여 소규모 권역단위로 개발, 지역주민과 지역 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 지역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적 개발' 등이다.

2005년도는 2004년도와 기본방향이 같으며, 장기목표(2004년부터 10년간 농촌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1,000개 소권역 우선 지원)와 소권역의 범위(정의)가 추가되었다. 사업 목적에 따라 사업의 추진방향도 변화되었다. 2006년도에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지역 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추진,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지역의 잠재자원을 특성화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사업 초기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체계를 정착시킨 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2007년도의 추진방향은 2006년도 같으며, 권역의 정의(범위)는 '1개 법정리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규모 권역'으로 권역 개수가 3~5개에서 1개 이상으로 변화되었다.⁶⁾ 2008년도에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전

6) 초창기 사업권역의 경우 법정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일정 규모 이상) 동질성이 약한 마을이 권역으로 포함되는 사례가 있다. 이로 인해 권역 내 마을간 의사결정구조가 복잡해지고 있으며, 사업비를 마을단위로 분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07년도부터 지침에는 소권역(행정리의 수 및 가구수)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여

표 2. 사업의 추진방향 변화

| 구분 | 추진방향 |
|-----------------------------|--|
| 2004년 (추진 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규모 권역단위로 개발 ○ 농촌지역을 전원생활 여가휴양 자연환경보전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원적 기능을 확충 ○ 지역별 특성을 살려 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특성화 개발 ○ 지역주민과 지역 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 ○ 지역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적 개발 |
| 2005년 (시책 및 추진 방향) | <p>가. 기본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권역 단위로 개발 ○ 지역주민과 지자체, 지역 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으로 추진 ○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 지역의 잠재자원을 특성화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 사업 초기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체계를 정착시킨 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p>나. 장기사업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년부터 10년간 농촌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1,000개 소권역을 우선 지원 ※ 소권역 : 동일한 생활권, 영농권, 수리권 등으로 같은 특성을 가지며, 주민간 유대감을 갖는 인근 3~5개마을(법정리, 예시적규모)로 구성되는 소규모 권역 - 소권역내 포함되는 마을수는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 가능 |
| 2006년 (시책 및 추진 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권역 단위로 개발 ○ 지역주민과 지자체, 지역 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으로 추진 ○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 지역의 잠재자원을 특성화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 사업 초기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체계를 정착시킨 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소권역 : 동일한 생활권, 영농권, 수리권 등으로 같은 특성을 가지며, 주민간 유대감을 갖는 인근 3~5개 마을(법정리, 예시적 규모)로 구성되는 소규모 권역 - 소권역내 포함되는 마을수는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 가능 |
| 2007년 (시책 및 추진 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권역 단위로 개발 ○ 지역주민과 지자체, 지역 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으로 추진 ○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 지역의 잠재자원을 특성화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 사업 초기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체계를 정착시킨 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소권역 : 동일한 생활권, 영농권, 수리권 등으로 같은 특성을 가지며, 주민간 유대감을 갖는 1개 법정리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규모 권역 - 소권역내 포함되는 마을수는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 가능 |
| 2008년 (추진 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권역 단위로 개발 ○ 지역주민과 지자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으로 추진 ○ 권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개발 ○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역할분담 ○ 권역의 잠재자원을 소득과 연계하여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제도 도입 ※ 소권역 : 동일한 생활권, 영농권, 수리권 등으로 같은 특성을 가지며, 주민간 유대감을 갖는 1개 법정리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규모 권역 - 권역 내 포함되는 마을수는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 가능(별표 2. 소권역 구분 요령 참조) |

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역할분담, 권역의 잠재자원을 소득과 연계하여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인센티브(incentive)와 페널티(penalty)제도 도입"으로 변화되었다.

즉 사업 추진 주체의 역할 분담화를 통해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사업 추진과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업 추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권역별 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 및 중간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결과에 대한 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소권역 구분에 대한 상세한 지침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표2 참조)

3) 사업내용의 변화

본 사업은 지역실정에 따라 기초생활시설, 문화·복지시설, 소득기반시설, 농촌관광시설, 경관시설 등과 소득확충,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소권역별 특성화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 메뉴는 시설과

지역역량강화로 세분되어 있다.

2004년도 본 사업의 내용은 소득확충시설(특산물판매장, 관람기초시설, 체험시설 등), 권역특성사업(마을소공원, 관광안내소, 공동활용시설 등), 기초생활시설(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부분으로 구분하여 소득증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그리고 개발의 유형은 기본유형 5가지(전통보전형, 친환경육성형, 자연생태보전형, 기초경관정비형, 경관주택증점형), 복합유형(농촌관광기반형, 지역 특성화형, 기초생활복지형) 3가지로 분류하여 추진되었다.

2005년도의 사업내용은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마을소공원, 담장정비, 마을숲 정비, 빈집 철거 등), 기초생활환경정비(마을내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주택신·개축 등), 소득기반확충(농산물가공시설, 공동집하시설 등), 마을기반정비(마을재개발·재정비, 빈집 및 주택용지공급계획 등, 마을기반정비,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지역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관련사업), 소프트웨어(S/W) 관련사업(마을기획 컨설팅, 홍보마케팅, 주민교육 및 인구유치 프로그램 등)으로 세분되었으며,

사업신청시 동질생활권에 있는 소권역이 선정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하였다.

구체적인 사업 메뉴를 별도로 마련하여 추진되었다.

2006년도의 사업내용에는 지역실정에 도시민·은퇴도시민의 농촌정주지원을 위한 마을기반정비(마을재개발·재정비, 빈집 및 주택용지공급계획 등)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관련 사업으로는 인구유치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 2007년도의 사업내용 중 소득기반시설은 공동육묘, 공동저장, 집하시설 등으로 변화되었으며, 권역별 고유 테마형성에 맞는 중점 개발과제를 도출하여 집중 육성하도록 하였다. 2008년도에는 소프트웨어관련 사업이 지역역량강화라는 부분으로 변화되어 추진되었다.

4) 사업지원 조건의 변화

본 사업(2004년의 경우)은 권역당 3년간 70억원 수준을 지원(국고 80%, 지방비 20%)하는 사업이다. 물론 지역여건과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기본계획수립비는 권역당 1억원이 정액 지원되며, 사전환경성검토와 문화재지표조사가 포함된다. 2005년도는 보조사업비와 융자사업비로 구분되어 지원되었다. 농촌관광기반시설 및 소득기반시설의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비는 농특회계로 별도 지원되었다.

2006년도는 대부분의 내용이 2005년도와 유사하며, 주택정비의 호당 지원기준은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지침내용을 준용하게 되었다. 2007년도에는 권역의 규모에 따라 지원한도를 40~7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였으며, 마을 수 또는 가구 수 규모에 따라 대, 중, 소로 구분하고 권역사업비를 기준사업비로부터 직선보간법으로 가감하여 산정하여 지원하도록 구체적으로 보완되었다.

2008년도의 지원형태는 기본계획수립비 등(농특회계)은 국고 100%, 사업비(균특회계)는 국고 80%, 지방비 20%로 지원하였다. 그리고 농촌체험·관광기반시설 및 마을공동소득기반시설의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하고, 부지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비의 자부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표3 참조)

표 3. 사업 지원조건의 변화

| 구분 | 사업 지원조건 |
|-------|---|
| 2004년 | 융자사업비(호당 지원기준)는 정주권개발사업 지침내용을 준용하며, 주택신축(개축)은 호당 20백만원(연리 5.5%, 5년거치 15년상환)을 지원하며, 주택개량(부분)은 호당 5백만원(연리 4.0%, 3년거치 7년상환)을 지원함 |
| 2005년 | 사업기간이 권역당 3~5년간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초생활시설(주택 제외), 문화·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은 전액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며, 소득기반시설은 마을주민 공동(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 80% 보조되며, 20%는 자부담하게 하였음 |
| 2006년 | 주택정비의 호당 지원기준은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지침내용을 준용함 |
| 2007년 | 주택정비는 농촌주택정비(신축·개량) 융자금으로 별도 지원하도록 하였다. 즉 권역의 규모산정에 있어 기준사업비는 55억원이며, 5개 마을(행정리), 350가구를 기준으로 하였음 |
| 2008년 | 주택신축 융자금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하도록 변화되었음 |

2.4 추진실적 및 연도별 투입 계획

본 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0개 시도에서 177개 권역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1,000개 권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2004년~2013년 496개 권역, 2014년~2017년 504권역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008년도에 45개 권역이 선정되었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경북이 32개 권역으로 제일 많다. 전남 31개 권역, 전북 23개 권역, 경남 22개 권역, 강원 21개 권역 순이며, 제주 4개 권역이다. 2004년도에는 36권역이 선정되었으며, 1차년도 사업이 끝나고 대부분이 2차년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05년도에 선정된 40개권역 중 20개 권역은 2006년도에 사업이 착수되었고, 나머지 20개 권역은 2007년도에 사업이 착수되었다. 2008년도에 선정된 36개 권역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다.⁷⁾ 2007년까지 재정은 국비 730억원, 지방비 167억원 총 897억원이 투입되었다. 2008년에는 163억원을 투입될 예정이며, 2009년 이후에는 5,675억원을 투입될 계획이다.(표4 참조)

표 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연도별 대상지 현황(단위: 권역수)

| 구분 | 인천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
| '04 | - | 4 | 4 | 2 | 5 | 4 | 5 | 6 | 5 | 1 | 36 |
| '05 | - | 4 | 3 | 4 | 3 | 4 | 8 | 7 | 6 | 1 | 40 |
| '06 | 1 | - | 3 | 2 | 2 | 3 | 4 | 3 | 2 | - | 20 |
| '07 | - | 4 | 5 | 1 | 2 | 6 | 6 | 7 | 5 | - | 36 |
| '08 | 1 | 1 | 7 | 2 | 6 | 6 | 8 | 9 | 3 | 2 | 45 |
| 합계 | 2 | 13 | 22 | 11 | 18 | 23 | 31 | 32 | 21 | 4 | 177 |

2.5 사업시행(진행) 현황

본 사업의 시행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1단계 : 1~3년차, 2단계 : 4~5년차)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2단계 사업시행계획은 1단계 사업시행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수립하며, 균특회계로 시행하고 있다. 132개 권역(2008년 선정된 45개 권역 제외, 2008년 9월 기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를 거쳐 2005년 말부터 사업이 착수되었으며, 총 2,411개 공종 중 520개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953개 공사가 착수되어 진행 중에 있다. 설계 완료율은 48.5%이며, 공사 완료율은 21.6%로 낮은 수준이다.(표5 참조)

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실태 분석

본 연구의 실태 분석은 16권역(표6 참조)에 대하여 사업의 핵심 내용인 소득, 소프트웨어, 공동이용시설 등에

7) 거점면종합개발사업 대상지역은 2007년 4권역, 2008년 4권역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 8개 권역이 선정되어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5. 사업 추진상황

(2008년 9월말 기준)

| 구분 | 지역 | 권역수 | 사업(공사부문) | | | | |
|-----|-----|-------|----------|-------|-------|-------|-------|
| | | | 계획 | 실제 완료 | 시행 인가 | 공사 발주 | 공사 준공 |
| 공중수 | 인천 | 1 | 16 | 9 | 9 | 8 | 0 |
| | 경기 | 10 | 201 | 103 | 92 | 92 | 66 |
| | 강원 | 16 | 309 | 149 | 131 | 109 | 81 |
| | 충북 | 12 | 205 | 122 | 116 | 99 | 39 |
| | 충남 | 13 | 220 | 103 | 88 | 77 | 43 |
| | 전북 | 15 | 295 | 168 | 155 | 152 | 60 |
| | 전남 | 26 | 421 | 200 | 190 | 155 | 85 |
| | 대구 | 1 | 18 | 0 | 0 | 0 | 0 |
| | 경북 | 21 | 433 | 174 | 144 | 130 | 88 |
| | 경남 | 18 | 249 | 122 | 115 | 111 | 42 |
| | 제주 | 3 | 44 | 20 | 20 | 20 | 16 |
| 계 | 136 | 2,411 | 1,170 | 1,060 | 953 | 520 | |
| 추진율 | | | 48.5% | 44% | 39.5% | 21.6% | |

* 한국농어촌공사 자료 참조

3.1 소득

1) 소득기반시설

조사 권역의 소득기반시설은 권역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하지만 공통적인 시설은 농산물 직판장과 저장창고, 육모장, 체험 농장, 공동 축사, 장류가공시설, 숙박

표 6. 조사대상 권역의 기본현황

| 도별 | 권역명 | 위 치 | 사업비 (백만원) | 면적 (ha) | 행정리 (별정리) | 가구수 | 인구수 (명) |
|-----------|-------|-------------------|--------------|------------|--------------|-------|------------|
| 경기 (2) | 연수 |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의 1개리 | 6,736 | 2,430 | 3(2) | 324 | 781 |
| | 석산 | 이천시 울석산리의 5개리 | 6,560 | 920 | 6(5) | 315 | 799 |
| 충북 (3) | 가곡 | 단양군 가곡면 이의곡리의 2개리 | 6,667 | 4,672 | 5(3) | 310 | 767 |
| | 감곡 | 음성군 문촌리의 3개리 | 6,150 | 2,471 | 14(4) | 1,342 | 3,923 |
| | 지 내* | 영동군 학산면 지내리의 2개리 | 6,760 | 2,278 | 11(3) | 530 | 1,114 |
| 충남 (2) | 반산 | 부여군 규암면 반산리의 3개리 | 5,442 | 835 | 2(1) | 293 | 573 |
| | 철갑산 |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의 4개리 | 6,126 | 1,746 | 5(5) | 597 | 1,767 |
| 전북 (3) | 선동 | 고창군 선동리의 2개리 | 5,446 | 780 | 5(3) | 237 | 562 |
| | 광활 | 김제시 은파리의 2개리 | 6,660 | 3,208 | 20(3) | 817 | 2,099 |
| | 금강철새* | 군산시 주곡리의 2개리 | 6,300 | 790 | 9(3) | 393 | 1,015 |
| 전남 (2) | 수문 |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의 2개리 | 6,788 | 690 | 5(3) | 537 | 1,367 |
| | 오봉 |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의 2개리 | 6,789 | 2,354 | 11(3) | 865 | 2,046 |
| 경북 (3) | 상내 | 문경시 마성면 상내리의 1개리 | 5,988 | 1,680 | 4(2) | 224 | 510 |
| | 부석사 |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의 2개리 | 6,560 | 2,525 | 6(3) | 475 | 1,276 |
| | 회룡포 |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의 3개리 | 6,550 | 1,226 | 8(4) | 925 | 2,244 |
| 경남 (1) | 구계 | 창녕군 영산면 구계리의 2개리 | 3,766 | 1,105 | 2(2) | 312 | 818 |

* : '05년도 권역

(민박)시설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 특이한 권역은 부여 반산 권역의 곤충나라로서 이 시설에 권역의 사업비가 집중 투자되어 지역의 핵심적 소득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별로 배분할 계획이다. 이천 석산 권역, 고창 선동 권역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장흥 수문 권역의 다슬기 양식장, 영주 부석사 권역의 사과선별 및 판매장, 영동 지내 권역의 포도가공 공장 및 체험장 등은 지역적 특산품과 연계된 시설이다. 고창 선동 권역의 청보리 축제는 다른 권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사례이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전국적인 축제로서 권역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영주 부석사 권역의 사과테마공원은 관련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집중화시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조사 권역의 일부에서는 소득 사업을 하지 않거나 기본계획의 소득관련 내용이 크게 변경된 곳도 있다. 즉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사업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자부담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한편, 몇 개의 권역에서 된장, 고추장과 같은 장류를 가공하는 시설들이 건립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것인지, 경쟁력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소득지원시설은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2) 체험프로그램(program)

체험프로그램은 권역별로 자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천 석산 권역은 3~4개 마을이 연계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교적 상호 연계가 잘 되고 있다. 석산 권역에서 석산2리의 연소득은 3천만원 정도로서, 농업 소득 외 농사체험, 농산물판매, 민박 등을 통해 가구당 매출기준으로 천만원정도의 연소득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는 약 5천명이 방문하여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2008년 9월까지 만여명이 방문하였다.

하지만, 스타 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 권역을 제외하고는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이 원만하지 못하며, 특히 권역별 체험프로그램이 유사하여 지역적으로 특성화되지 못하다. 체험프로그램은 소득의 향상과 관계되기도 하지만, 방문자의 재방문 유도과 농산물 판매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3) 농산물판매

농특산물 판매는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농산물의 지역적 소비를 촉진하고,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농업 소득이 감소하는 전반적인 추세에서 대부분 권역에서는 판매장과 같은 공간을 두어 직접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양평 연수 권역에서는 농산물(매실, 배, 잡곡, 고추, 옥수수 등) 직접 판매를 통해 30% 정도의 소득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단양 가

곡 권역의 한드미마을과 인근마을은 농산물(오미자, 수수, 콩, 옥수수, 고구마)의 직접 판매로 소득이 20% 정도 증가하였다.

이천 석산 권역도 방문객에 대한 농산물 판매 등으로 주민소득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부래미마을(석산2리)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마을은 아직 소득 향상이 저조한 상태이며, 권역 전체에서 소득 증대가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권역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계량적 수치로 소득 증가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적은 소득이라도 증가한 것은 본 사업의 긍정적 측면이다. 하지만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농산물 판매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4) 소득의 관리와 분배

소득기반시설,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농산물의 판매 등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농촌마을의 지속성 유지와 경제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공평하게 배분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조사 권역에서는 지역별로 독특한 지혜를 발휘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천 석산 권역은 민박 수익의 50%를 마을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단양 가곡 권역에서는 수익금의 10~20%를 권역의 공공기금으로 출연할 계획이다. 그리고 영동 지내 권역의 경우도 소득사업의 수익금 5%를 권역 공동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장승 수문 권역은 수익의 3%는 권역 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 김제 광할 권역도 소득사업은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10년간 수익의 2%를 권역운영비로 출연할 예정이다. 영동 지내 권역의 경우는 참여 회원(60명)에게 공평하게 소득(2007년, 50만원 정도)을 분배하고 있다. 그리고 두 개리가 연계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리 별로 수익을 배분하고 있었으며, 특정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수익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한 마을에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

3.2 소프트웨어

1) 주민역량 및 의지

조사 권역의 공통적인 사항은 주민 교육과 견학을 통하여 주민의 의식 전환이 이루어졌고, 주민 역량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을간, 주민간 갈등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으며,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다. 특히 페널티를 받은 권역의 경우는 주민간의 갈등과 이해 부족으로 사업의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권역도 있으며, 주민의 갈등과 사업 지연은 사업을 이해하고 주민의 화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주민 교육은 추진위원을 비롯한 일반 주민도 참여하고 있지만, 일반 주민의 전반적인 교육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주민 교육이 해외 견학인 경우는 이로 인해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마을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권역도 있다. 한편, 주민 교육과 견학이 추진위원 등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되거나 혜택이 전반적으로 고루 돌아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하지만 주민 교육이 권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없는 한계도 분명히 있다.

2) 브랜드(brand) 개발

권역의 브랜드 개발은 권역의 특성을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마케팅과 함께 연계되어야 할 사항이다. 1차 사업이 끝난 권역에서는 브랜드가 대부분 개발되어 있거나 개발 중에 있다. 영동 지내 권역에서는 '영랑골'이라는 브랜드가 개발되어 실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문경 상내 권역에서는 '나실마을', 금강 칠새권역에서는 '새뜨란', 영주 부석사 권역에서는 '아람진'이라는 브랜드를 개발되었으며, 영주 부석사 권역에서는 특산물인 사과의 포장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반면에 해당 시군의 브랜드가 있어 권역의 브랜드가 의미가 없는 권역도 있으며, 브랜드 개발에 대한 소요 경비에 비해 결과물의 질이 좋지 못한 권역도 있다. 즉 몇몇 권역에서는 지역의 브랜드가 개발되어 중복되거나 브랜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1,000개의 권역에서 1,000개의 브랜드가 만들어 지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며, 상당한 예산을 들인 브랜드를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3) 홈페이지(homepage) 구축

조사 권역에서는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컨설팅, 마케팅, 홈페이지제작, 교육 및 견학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홈페이지 구축은 브랜드 개발, 마케팅, 홍보 등과 함께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핵심적 부분이다. 하지만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 곳은 4~5개 권역에 불과하다. 1단계 소프트웨어 사업이 끝났지만 홈페이지 구축이 되지 못한 것은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브랜드 개발, 마케팅 전략 등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는 것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3.3 공동이용시설

1) 입지적정성과 사업 변경

시설의 입지는 비교적 만족해하고 있다. 하지만 부지 확보 문제(경제적 부담)로 공동이용시설이 적정한 위치에 위치하고 못하는 경우도 있다. 부지문제로 인해 공동이용시설의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사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부지확보 문제, 물가상승, 주민요구에 의하여 설계변경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단위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2) 운영관리(유지관리)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이 계획서상에 나타나 있지만 실제로 향후 운영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이 없어 비어 있는 경우도 있다. 커뮤니티센터 경우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고민하는 권역이 적지 않다. 소득이 발생하는 권역은 그나마 수익금의 일부로 시설물을 유지하지만 건물이 건립된 후 운영관리의 문제로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4) 주민의 의견 반영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 요구에 의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갈등과 문제점이 발생하는 권역이 있다. 사업기간 및 사업비의 한계성 때문에 주민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지만, 주민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간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과 및 개선방안

4.1 소득

1) 소득증가

2004년에 선정된 권역은 완전히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큰 효과는 없지만 미미한 소득증가와 간접적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한편 소득사업이 2단계 사업으로 계획되거나 아직 종결되지 않아서 실질적 소득효과가 거의 없는 권역도 있다. 현 단계에서 1차 사업의 결과는 가시적으로 확연히 보이지 않으며, 1차 사업의 결과물로 소득변화까지 논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하지만, 점진적인 소득 증가를 예상할 수 있으며, 사업의 관계자들도 이와 같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본 사업 정책적 의의 중 하나이다.

2) 중심마을 위주의 집중투자

사업권역 중에는 중심마을에 집중 투자하여 권역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지구가 있다. 이로 인해 권역내의 중심마을 이외의 일부 마을은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 권역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마을주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주민의 소득이 발생되고 있다. 본 사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소득 증대이다. 소득 증가는 주민이 바라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업 계획 수립시 지역적 특성과 장점, 미래성(지속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용에 담아야 한다. 또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4.2 소프트웨어

1) 주민교육과 견학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주민의식 개선과 의식변화, 주민의 역량 강화가 사업의 가장 큰 효과이며 만족도도 높았다. 하지만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실속 있는 견학, 체험 등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해외 견학시 자부담을 일부

지우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과 사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2) 브랜드 개발

브랜드는 권역의 홍보 수단으로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이미지로 개발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브랜드 개발은 효율성과 가치, 지속적인 예산 지원의 당위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개발된 브랜드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인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3) 사업자 선정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1단계사업이 끝나면 2단계사업을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때 새롭게 사업자를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1,2단계 사업자가 다를 경우는 사업 진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간 소요(사업의 공백 발생), 사업자와 주민과의 친밀성 형성 등에 어려움이 있다. 소프트웨어 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다년차 계약이나 1,2단계 총괄계약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2단계 사업추진은 1단계의 성과에 따라서 계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3 공동이용시설

1) 유지관리

이 사업에서는 소득사업을 통해 수익금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전환하여 마을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유지관리에 대한 이해의 폭이 달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설득이 필요하고, 주민주도형 유지관리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득기반시설과 체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관리비, 그리고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시설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운영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적정 규모의 시설물 계획과 운영관리비가 적게 드는 친환경적 시설물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부지확보

본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시설의 부지 확보에 대한 대안과 지혜가 필요하다. 소득기반시설의 부지는 주민이 확보하여 추진하지만 공동이용시설에 필요한 부지는 사업추진 전에 확보하는 방안과 시군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우선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다.

3) 주민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본 사업이 상향식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교육 및 견학 등으로 주민 의식이 높아져 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실정이므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계획에 담아야 한다.

4.4 정책적 측면

1) 권역의 범위

초창기 본 사업의 권역은 대부분 2개이상 법정리로 이루어져 있어 권역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지침에서 사업 권역은 동일한 생활권, 영농권, 수리권 등 같은 특성과 주민 유대감을 갖는 소권역이다. 그러나 법정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일정 규모 이상) 동질성이 약한 마을이 권역으로 포함되는 사례가 있다. 이로 인해 권역 내 마을 간 의사결정구조가 복잡해지고 있으며, 사업비를 마을단위로 분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권역의 범위 설정은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권역의 규모를 기준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2) 전담조직 체제와 담당자 교육

본 사업은 종합개발사업으로 사업의 공중수가 많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로서 공사 및 지자체 담당자는 사업의 이해와 법제도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담당자 대부분이 본 사업 이외의 과다한 업무를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은 권역의 일에 소홀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협조(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 공사의 인사이동에 의해 사업 도중에 담당자 교체가 이루어지는 권역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은 공무원, 공사에 대한 시선이 굵지 않다. 본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전담 체제가 필요하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인사이동을 자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높아진 주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시군 담당자와 공사 담당자에 대한 한 차원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

5. 결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지속가능한 농촌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업의 내용 변화와 문제점, 성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개발정책의 큰 틀에서 마을(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사업내용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본 사업의 핵심은 지속적 소득의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 계획 수립에 있어 소득 창출과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는 다년차 계약이나 1, 2단계 총괄계약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본 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예산의 일정비율은 주민을 교육하고 훈련해서 훌륭한 인재로 육성하는데 중점 투입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과 실

속 있는 견학, 체험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넷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만족도를 높이고 유지관리비의 절약을 위해 친환경적인 개념이 반드시 시설계획에 담겨져야 한다. 또한 유지관리 측면에서 시설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구체적인 운영관리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경제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시설물 계획과 운영관리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시설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를 지정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에 대하여 좀 더 실제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 추진방식에 대한 진정한 검토가 필요하며, 근본 취지가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참고 문헌

1. 김경량 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간평가체계 개발, 농촌계획, Vol.12 No.2, 2006
2. 김승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제8권 3호, 2005.10
3. 김승근, 제천시 용두산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수요 및 의식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제8권 3호, 2006.10
4. 농어촌연구원, 농촌마을 특성화에 대한 정책방안 연구, 2001.12
5. 송인성 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발전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05
6. 안성기 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분석,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제3권 2호, 2001.6
7. 이정환 외, 농촌마을 유형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계획내용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7 추계정기학술대회 10. 27
8. 한경수 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간 점검을 위한 평가지표 적용사례, 농촌계획, Vol.13 No.2, 2007
9. 황한철, 농촌개발사업의 추진실적 평가항목 선정 및 가중치 산정에 관한 연구, Vol.13 No.2, 2007
10. 강원수산포럼(김중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개선방안, 강원수산포럼 제90차 정기세미나 자료, 2009.5.12

* 본 과제의 연구진은 현장조사 때 협조해 주신 마을(권역) 주민 및 대표자, 지역의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연구자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접수: 2009.10.10, 심사완료: 2009.11.01)